



아시아리뷰

제15권 제3호(통권 35호), 2025

서평



악당적 사고 서설

김항 지음, 『어떤 패배의 기록: 전후 일본의 비평, 민주주의, 혁명』(창비, 2025)을 읽고

심희찬 연세대학교 근대한국학연구소 HK교수

I. 트릴로지의 마지막 저서

일본에 관하여 누구보다 날카로운 사유를 전개해온 김항이 전작이라 할 수 있는 『제국일본의 문턱: 삶과 죽음의 틈새에서 보다(帝國日本の罅: 生と死のはざまに見る)』(岩波書店, 2010)와 『제국일본의 사상: 포스트 제국과 동아시아론의 새로운 지평을 위하여』(창비, 2015)를 잇는 새로운 책 『어떤 패배의 기록: 전후 일본의 비평, 민주주의, 혁명』(창비, 2025)을 내놓았다. 저자는 일본 정치사상사 연구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는 연구자로서, 일본을 본격적으로 다룬 그의 저작이 오랜만에 간행되었다는 사실에 커다란 반가움을 느낀다. 다만 구체적으로 책의 내용을 소개하기 전에 일단 지적해둘 점이 있다. 그것은 일본의 사상에 관한 저자의 트릴로지(trilogy)를 오직 ‘일본’에 관한 책이라고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이 세 권의 책은 분명 일본을 분석의 소재로 삼고 있다. 하지만 이 책들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일본이라는 특수한 지역에 대한 지식의 축적이나 증가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보편적 물음을 겨냥한다. 그리고 그 물음은 이른바 ‘휴머니즘’ 따위는 관계가 없다. 따라서 『어떤 패배의 기록』을 읽기 위해서는 트릴로지의 앞선 저작들에서 저자가 주장했던 인간의 개념에 대해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면상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제국일본의 ‘문턱’이 있다. 문턱이란 인간을 ‘정상’과 ‘비정상’으로 분할하면서 통합하는 기제를 가리킨다. 전자의

범주에는 언어를 통한 법치의 대상이 됨으로써 공동체의 규범을 습득한 자들이 포함되고, 후자의 범주에는 휴머니즘적 인간의 담화라는 껍질이 완전히 벗겨진 채 언제든 배제와 추방, 아니 살육과 희생의 대상으로까지 전락할 수 있는 자들이 포함된다. 국가란 바로 이러한 분할의 문턱 위에 성립하는바, 근대 이후 일본은 이 점을 사념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국가로서의 존립 근거를 ‘자연적’인 것인 양 분식했다. 이때 식민지의 조선인들은 순연하지 못한 존재로서 일본이라는 자연적 공동체의 바깥으로 밀려나지만, ‘그와 동시에’ 제국의 신민으로서 다시 내부에 포섭된다. 그렇게 “제국일본의 비자연적 성립”을 증좌하는 “식민지 인민의 육체”는 제국일본의 문턱을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金杭, 2010: 17).

제국일본의 ‘사상’은 이 문턱과 깊은 관련을 지닌다. 그것은 백치, 해적, 파르티잔 같은 존재들을 ‘비(非)인간’으로서 사회의 외부로 배척하거나 국가의 지층 아래에 매장해왔다. 더욱이 일본의 패전과 제국의 해체 이후에도 이러한 “지성의 콘크리트 공사”는 중단되지 않았다(김항, 2015: 9). 패전 후 초대 도쿄대학 총장을 역임했으며 새로운 교육기본법의 실질적 내용을 구성했던 난바라 시게루(南原繁)는 식민지의 상실을 “외지이종족(外地異種族)이 떨어져나가 순수 일본으로 되돌아온 지금”이라고 표현하여 제국의 기억을 자연적인 민족 공동체의 회복이라는 판타지로 가리고자 했다(김항, 2015: 218). 이처럼 평화와 자유라는 전후 일본의 자기 인식은 “피식민지’ 인민의 추방과 이주와 착취를 토대로” 이루어낸 “식민지배의 본원적 축적”을 은폐함으로써 구축될 수 있었다(김항, 2015: 180).

이처럼 제국일본의 ‘문턱’과 ‘사상’은 패전 이후에도 소멸하지 않았고, 오히려 과거 제국의 영역이었던 동아시아의 신생 국민국가 전반으로 확대되었다. 국민국가의 근원에 자리한 인간의 분할과 통합이라는 문턱, 그리고 이를 은닉하는 근대적인 인간에 관한 사상은 역내 각지에서 여전히 강고하게 작동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 간의 화해나 동아시아의 연대를 내세우는 주장은—그 진심의 심도와는 별개로—모두 허무한 메아리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그러한 논의가 이른바 정상적인 인간, 즉 교양을 갖춘 자유주의적 인간을 보편적인 모델로 삼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저자는 그러한 보편적 모델로의 통합을 위해 배제되어야만 했던 “괴상한 실존”(김항, 2015: 325), 바꾸어 말하자면 “절대 고독”을 존재의 본질로 삼는 “하나의 살덩어리, 하나의 움직임”으로서의 인간에 주목하려고 한다(金杭,

2010: 2-3). “국가의 관계성”이라는 “인간이 만들어낸 계율”(金杭, 2010: 3-8)이 거부당하는 지점에서 살며시 나타날 “무능하고 우울한 삶의 형상”, “비겁하고 우유부단하고 나약한 실존들”(김향, 2015: 324-325)이야말로 제국일본의 문턱과 사상을 붕괴로 이끄는 사유의 가능성을 제시해주리라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본은 그와 같은 사유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패배’했다. 국가의 심연에 새겨진 벌거벗은 인간을 탐사하기 위해 존재의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대신, 일본은 ‘평화헌법’과 ‘전후민주주의’라는 보편주의에 뿌리를 가진 사상에 기대는 손쉬운 길을 택했다. 이것이 저자가 제국일본의 문턱과 사상을 거쳐 『어떤 패배의 기록』에서 내린 진단이다. 물론 이 패배는 일본만의 것이 아니다. 우리 역시 거듭된 패배를 경험하고 있다. 이 점을 염두에 두면서 이제 『어떤 패배의 기록』을 펼쳐보자.

II. 일본의 사상, 혹은 패배의 기록들

지금으로부터 약 10여 년 전, 아베 신조(安倍晋三)를 중심으로 하는 세력이 군사력의 보유를 금지한 평화헌법의 개헌을 추진하면서 일본의 전후민주주의가 심대한 위기에 빠졌던 일을 기억할 것이다. 주지하듯이 아베는 뜻을 이루지 못했는데, 특히 천황이 반대 의사를 표명한 점이 개헌의 커다란 걸림돌이 되었다. “천황이 평화주의 헌법을 지켜낸 궁극의 수호자였던 셈이다”(김향, 2025: 6). 이는 가장 최근에 벌어진 일본 정치사상사의 뼈아픈 ‘패배’다. 평화헌법을 지켜낸 일이 어째서 패배인가?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 즉 광신적 천황제 전체주의에 대한 반성을 주창하며 출발한 전후민주주의가 결국 국민이 아니라 천황의 의지로 지탱되었기 때문이다”(7쪽). 패전 후 일본은 제국주의와의 단절을 선언하며 평화와 민주주의를 국가의 나아갈 방향으로 선언했다. 그런데 주권자인 국민이 아닌 천황에 의해 개헌이 좌초되었다는 최근의 사태는, 일본이 국가의 정체성으로 내세우는 평화헌법과 전후민주주의가 그 극복의 대상이어야 할 천황에 의해 도리어 유지되고 있다는 기묘한 사실을 보여준 셈이다.

저자가 언급하듯이 『어떤 패배의 기록』에서 다루는 “여러 논의는 모두 이 패

배에 관한 것이다”(7쪽). 다시 말하지만, 이때의 패배란 보편적 인권이나 민주주의가 이를 부정하는 사상이나 세력에게 굴복하는 사태 등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그게 아니라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 자체에 내장된 인간의 배제와 포섭의 문제를 사유의 영역으로 끌어 올리지 못했다는 점 자체가 패배라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패배는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7쪽). 이를 살펴보기 위해 저자는 책을 비평, 민주주의, 혁명이라는 세 개의 장으로 나누고, 각각의 영역에서 벌어진 패배의 기록을 규명한다.

1. 비평

먼저 ‘제1부 비평’에서는 일본을 대표하는 두 명의 비평가 고바야시 히데오(小林秀雄, 1902~1983)와 가라타니 고진(柄谷行人, 1941~)의 텍스트가 검토된다. 제1장 ‘말기의 눈과 변경의 땅: 고바야시 히데오의 비평과 만주 기행문’은 “전제된 개념이나 논리를 제거하여 가능한 한 모노 자체에” 다가가려고 했던 고바야시의 비평을 다룬다(22쪽). ‘모노(モノ)’란 사물 그 자체, 곧 어떠한 관념이나 직관이 매개로서 구동하기 이전의 존재로서의 사물 그 자체를 가리킨다. 1930년대 마르크스주의 비판을 통해 비평을 하나의 장르로 성립시켰던 고바야시는 그러한 ‘주의’들을 ‘온갖 의장(様々な意匠)’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성토하는 한편, 그 어떤 이론이나 이념에도 치우치지 않고 반대로 그것들을 정지시키는 모노와의 만남을 추구했다. 이런저런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언어의 망”을 덮어씌울수록 모노의 실제성은 지저분해질 뿐이다(22쪽).

그런 고바야시에게 1941년의 진주만 공습과 아시아·태평양 전쟁의 발발은 여기저기에 어지럽게 흩어져있는 일본의 온갖 의장을 일거에 무화하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다가왔다. “그는 전쟁이라는 ‘절대적 사태’를 의미화하거나 치장하는 데에 끝까지 반대했다”(51쪽). 전쟁과 그로 인한 처참한 죽음은 인간의 삶에 기표화되지 않는 거대한 공백을 열어놓는다. 그래서 당대의 지식인들은 전쟁에 의미와 내용, 목적과 방향 등을 부여하고자 부단히 노력했다. 즉 전쟁을 이데올로기화하려고 했다. 인간의 이성과 지식으로 파악할 수 없는 공백의 공포를 어떻게든 견디고 순치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고바야시는 전쟁에서 모노와의 만남

을 통한 “궁극의 ‘일본’”을 본다(52쪽).

흥미롭게도 고바야시가 이 궁극의 일본을 발견한 것은 다름 아닌 식민지조선이다. 그는 조선인 지원병의 발랄하고 아름다운 표정에서 “진정한 일본인”의 모습을 경험하고 감격한다(53쪽). 여기에서 고바야시의 식민주의적 시선을 지적하기란 손쉬운 일이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고바야시가 조선인 지원병을 통해 “죽음을 아무런 의미화 없이 묵묵히”(53쪽) 받아들이는 존재, 다시 말해 휴머니즘적 인간의 담화라는 껍질이 완전히 벗겨진 채 모노와 마주한다는 진정한 존재의 아름다움을 체험한다는 사실이다. “이 일본이면서도 일본이 아닌 ‘비(非)식별역’에서 그는 자신의 비평 원리에 충실하게 일본/일본인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었다”(54-55쪽). 그렇다면 고바야시의 시선은 “주변에서야말로 중심의 비밀이 드러난다는 식민주의의 고유한 전도를 보여준다”고 해야 한다(55쪽). 진정한 일본인은 역설적으로 일본 ‘안’에는 없다. 그것은 일본의 안에 있으면서 일본의 바깥에 위치하는 ‘타자’에게서만 생성될 수 있다. 우리는 고바야시에게서 제국일본의 문턱과 사상이 붕괴하는 지점까지 나아간 비평 및 그 “궁극의 물음”(55쪽)을 볼 수 있다.

문제는 “고바야시가 온갖 의장을 걷어내며 도달한 식민주의의 전도”가 “패전 후 그 정치적 의미를 묻는 일 없이 망각”되었다는 점에 있다(55-56쪽). 일본의 사유가 패배를 시작하는 순간이기도 하다. 제2장 「현대 일본의 비평과 그 임계점: 가라타니 고진 『마르크스 그 가능성의 중심』은 가라타니의 논의를 사례로 고바야시가 개시한 궁극의 물음이 망실되는 과정을 검토한다. 가라타니 역시 고바야시와 마찬가지로 “모든 ‘주의’(ism)를 포함한 ‘의미’ 자체를 회의”했다(60쪽). 의미를 “질병”(61쪽)으로 간주한 가라타니는—1930년대의 고바야시가 그러했듯이—1970년대에 마르크스주의를 비판하면서 일본의 비평계에 등장했다. 그가 취한 전략은 “마르크스의 텍스트를 읽음으로써 교의로 가득한 마르크스주의를 내파하는” 것이었다(66쪽). 가라타니에게는 “마르크스주의”는 물론 “그에 대한 비난” 역시 “모두 의미에 사로잡힌 이성의 오류”에 불과했다(72쪽).

의미라는 질병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라타니는 칸트에게서 힌트를 얻은 “초월론적 가상의 자리를 향한 비평의 실천”을 마르크스의 『자본』 독해에 적용한다(79쪽). 이는 하나의 고정된 관점이나 시선이 아닌 끊임없는 “장소 이동”을 통

해 “작가가 의식적으로 지배하는 체계 속에 무언가 그가 ‘지배하지 못한’ 체계”가 있음을 드러내는 작업이었다(79쪽).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가라타니는 마르크스주의자 사이에서 금과옥조처럼 여겨졌던 “노동가치설과 착취론”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83쪽), “자본주의라는 가치와 의미의 질병을 비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89쪽). 다만 이와 같은 마르크스 해석의 정당성 여부는 이 책의 주된 관심사가 아니다. 저자의 시선은 장소의 이동, 즉 “화폐와 일반적 가치형태 사이, 일본과 외부 사이, 그 사이의 확보와 그 사이에 머무르는 것”을 “비평의 본령”으로 삼았던 가라타니의 “치명적인 한계”를 향한다(93쪽). 왜냐하면 가라타니의 사유에서 “이동할 수 없는 이들”, 그러니까 “묵인 채로 신음하는 이들”이 소실되기 때문이다(94-95쪽). 그리고 저자는 가라타니의 비평에 부재하는 이들의 존재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전후 일본을 만들어온 보편주의와 식민주의의 중첩을 추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95쪽). 바로 일본의 전후민주주의 말이다.

2. 민주주의

‘제2부 민주주의’는 다시 세 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제3장 「보편주의와 식민주의: 일본 전후민주주의의 임계점」은 앞장의 논의를 이어받아 일본의 전후민주주의가 “식민주의와 보편주의의 결합으로 존속해온 것임을 논증”한다(105쪽). 이를 위해 저자는 우선 박유하의 저작 『제국의 위안부: 식민지 지배와 기억의 투쟁』(뿌리와의파리, 2015)을 둘러싸고 벌어진 논쟁의 경위를 살펴본다. 『제국의 위안부』의 내용, 그리고 이 책의 간행 이후 한일 양국에서 펼쳐진 다양한 논전은 워낙 잘 알려져 있으므로 새삼 소개하지 않겠다. 저자가 보기에 “위안부 문제에 대한 박유하의 접근은 전후 일본에 대한 신뢰”, 특히 “일본 전후민주주의에 대한 굳건한 신뢰”에 입각해있다(110쪽). 박유하는 자신에 대한 “일본 좌파”나 한국의 “과격하 민족주의자들”의 비판을 “정치 우위”의 입장이라며 받아들이지 않는데, 일본의 전후민주주의가 그보다 “근원적인, 보편적인 이념과 가치”를 보전한다고 믿기 때문이다(112-113쪽). 그래서 박유하는 “전후민주주의가 이념으로 삼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나아가기 위해 모든 것을 “탈정치화”할 것을 주장한다(114쪽). “박유하의 궁극적 비판 대상은 정치”다(114쪽).

그리고 박유하에게 이 정치의 궁극적 형상 가운데 하나가 북한이다. “일본의 전후민주주의와 평화헌법에 체현된 인류 보편의 가치와 이념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북한 같은 ‘깡패국가’(rogue state)를 단호히 물리쳐야 하는 것이다”(117쪽). 저자는 박유하의 이러한 논의가 2015년 아베 정권이 무리하게 추진했던 ‘신안보법제’와 유사한 세계관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앞서 잠시 소개한 패전 이후 난바라 시게루가 주장했던 일본 재건 논리의 연장선에 있다고 평가한다. 그렇다면 난바라 시게루에서 ‘신안보법제’ 및 박유하로 이어지는 사고의 궤적에는 무엇이 내장되어 있는가? “섬멸전쟁”, 곧 “비인간을 배제하고 말살하는 궁극의 전쟁”이라는 사태다(127쪽). “또한 그것은 진보와 문명에서 뒤쳐진 야만을 배제하고 멸시하는 식민주의와 중첩”된다(127쪽). 박유하는 이러한 폭력의 계기에 무감각하다는 것이다. 저자는 보편주의의 옹호는 그 의도와 무관하게 도리어 보편주의의 중핵을 이루는 인간의 분할과 식민주의의 지속을 용인하는 자세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그 “순수하고 무구한 열정”은 “타자에 대한 악의 없는 배제를 필연적으로” 불러올 수 있다(137쪽).

다음 제4장 「평화, 천황 그리고 한반도: 와다 하루키와 전후 일본 평화주의의 함정」에서는 일본의 대표적인 양심적 지식인으로서 박유하도 높게 평가하는 와다 하루키의 작업을 고찰한다. 1970년대 한국의 민주화운동과 연대를 시작하면서 와다는 본격적으로 한반도 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데, 당시 그의 “세계관적 기초”는 “제국주의 비판과 식민주의 극복”에 있었다(151쪽). “한국의 민주화운동이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에 대항하는 것이란 인식” 아래 와다는 이를 “일국적 변화가 아니라 세계질서의 변화를 추동하는 계기로” 삼고자 했다(152쪽). 이후 와다는 ‘동북아 공동의 집’ 구상을 거쳐 위안부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하기 시작한다. 이는 냉전이 붕괴하고 역내 질서가 크게 요동치는 와중에 “식민주의와 제국주의의 비판과 극복보다는, 미래를 향한 지역 내 주체들의 대화가 과제인 역사 단계로 이행”했다는 와다의 정세 판단에 기인한 것이었는데, ‘아시아여성기금’이 빼격대는 등 “새로운 유토피아”를 향한 그의 노력은 생각만큼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다(160-161쪽).

이 지점에서 와다는 전술한 “전후 일본의 민주주의와 평화주의가 자리하는 정치적·사상적인 전제”, 즉 “식민주의와 보편주의의 착종”을 반복하고 만다(163

쪽). 특히 2010년대 이후 그는 “전후 일본의 평화주의, 천황과 국민과 지식인이 만들어낸 ‘평화국가’론의 진정한 모습”, “‘평화국가’로 살아남기 위한 길을 모색한 노력”을 확인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163-164쪽). 이러한 주장은 극우의 준동에 대한 “절박함에서 비롯된”(166쪽) 전략이기도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경우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에 대한 반성과 비판은 피식민지(인)와 피침략 지역(인민)으로 향하기보다는 인류의 정의라는 보편주의적 규범을 향하게 된다”(171쪽). 와다가 난바라의 언설을 높게 평가하는 대목에서도 이를 읽어낼 수 있다. 보편주의에 대한 희구를 “일본적 자연주의”(167쪽), 곧 일본인의 자연스러운 심성으로 환원함으로써 “어느새 와다는 수평적 지평에서 수직적 판결의 법정으로 이행”한다(177쪽).

이렇게 박유하와 와다의 텍스트에서는 배제되면서 포섭되는 식민지의 타자들, 곧 묶인 채 신음하는 이들이 사유의 범위 바깥으로 밀려난다. 그들은 보편주의에 기반한 평화와 민주주의라는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망”을 다시 온갖 의장으로 도입하는바, 여기에는 고바야시가 도달했던 “궁극의 물음”이 던져질 자리가 없다. 이는 전후민주주의를 지탱한 또 하나의 사유인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과학 담론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제5장 「핵의 현전과 일본의 전후민주주의: ‘현실적 이상주의’의 계보와 정치적 심연」은 저명한 정치학자 사카모토 요시카즈(坂本義和)의 논의를 중심으로 이와 같은 과학 담론과 전후민주주의의 공모를 지적한다. 일본은 인류사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원자폭탄의 투하를 경험했다. 사카모토 요시카즈(坂本義和)는 언제나 인류를 종말에 몰아넣을 수 있는 원폭의 위기를 현실로 받아들이는 한편,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이상적인 이념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난바라와 같이 인류 보편의 이념을 하나의 규제적 이념으로 상정함과 동시에 현실에 주어진 선택지를 냉정하게 선택해 나가는 일, 그것이 사카모토의 ‘현실적 이상주의’”였다(193쪽). 사카모토는 이러한 사상을 바탕으로 여전히 “균건한 근대 일본의 초국가주의”(192쪽), 다시 말해 파시즘과 군국주의의 부활을 견제하고자 했다.

그는 현실적 이상주의를 “전후민주주의의 심화”에 결부시켰다(197쪽). 사카모토가 보기에 “현실에서 평화 혹은 균형을 가능케 하는 요인은 힘이 아니라 민주주의라는 가치체계”였다(200쪽). 그러나 2011년의 동일본대지진과 뒤이어 발생

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민주주의가 핵/원자력을 통제 아래 둘 수 있다는 믿음”의 한계를 노정했다(206쪽). “3.11”은 “아무리 깨어 있는 시민이 연대하여 국가와 자본을 감시해도 핵/원자력의 근원적 위험을 통제할 수 없다는” “불편하고도 공포스러운 사실”을 우리에게 드러냈다(206쪽). 참고로 지금도 일본의 동북 지역에는 삶의 터전을 박탈당했음에도 이동은 불가능한, 그러니까 묶인 채 신음하는 이들이 국가와 민주주의로부터 배제/포섭된 상태로 남겨져 있음을 부기한다.

3. 혁명

마지막 ‘제3부 혁명’에서는 제국일본의 문턱과 사상, 그리고 전후 일본의 패배에 저항했던 급진적 정치운동의 운명이 그려진다.

1942년 러시아 태생 독일인 리하르트 조르게(Richard Sorge)가 코민테른의 지시를 받아 일본에서 스파이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체포/검거되는 이른바 ‘조르게 사건’이 발생한다. 조르게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고, 비밀리에 활동했던 다른 일본의 공산주의자들도 사형, 혹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6장 「혁명을 팔아넘긴 남자: 혁명정치의 아포리아에 관하여」에서는 훗날 그 밀고자로 낙인찍혀 갇은 고초를 겪은 이토 리츠(伊藤律)의 생애를 검토한다. 여기서 패전 이후 일본 공산당의 분열 과정과 그 정치적 투쟁의 희생양이 된 이토의 삶의 여정을 자세히 소개할 여유는 없다. 중요한 것은 “일본공산당이 지켜나가야 할 볼셰비키 노선의 진리”(230쪽)에 충실했던 이토가 권력투쟁에 의해 바로 그 진리 속에 유폐되고 말았다는 아이러니다. “신심 투철한 혁명가”였던 이토는 “스파이 혐의를 끝내 자백하지 않음으로써” “혁명정치의 진리와 정의”를 지켜냈다(234쪽).

그러나 “이 혁명정치의 승리는 현실세계의 진리와 정의에 이르는 길을 전혀 찾지” 못했다(234쪽). 1951년 중국에 밀항했던 이토는 일본공산당의 요청으로 26년간 중국공산당에 의한 수감생활을 겪었는데, 이렇게 물리적으로도 묶인 채 신음하는 존재였던 이토가 끝끝내 사수했던 “공산당의 정통성 주장은 진지한 논쟁의 대상이라기보다는” 대중매체에 의해 “하나의 음모로만 자리매김”되었다(242쪽). 매스미디어는 혁명의 진정성을 그저 하나의 볼거리로 바꾸어버렸다. 스

탈린 이후 미국은 냉전을 “옳고 그름의 싸움이라기보다는 비겁함과 당당함의 싸움이라는 프레임”으로 전환시켰고, “혁명정치의 진리와 정의는 ‘소극(笑劇)’”으로 전략했다(246-247쪽). “이토 리츠의 자기단련을 비롯한 마르크스주의의 혁명정치는 이 프레임 안에서 광대이거나 기만이거나 낭만으로” 표상되었다(255쪽). 혁명은 미국의 세계전략 아래 구축된 일본의 전후민주주의 속에서 그저 “하나의 스캔들로서 스펙터클”을 상연하는 무의미한 코미디로 유폐된 것이다(248쪽).

혁명의 진리가 대중의 관음증을 자극하는 음모론으로 해소되는 현상은 1960년대 일본을 휩쓸었던 학생운동과 그 귀결에서도 확인된다. 제7장 「요도호 납치 사건과 혁명의 황혼녘: 비밀, 음모, 테러와 북한이라는 무대장치」는 1970년 3월 31일 도쿄에서 후쿠오카로 향하던 비행기를 납치하여 평양으로 건너간 적군파의 ‘요도호 납치 사건’을 다룬다. 결론적으로 “그들의 혁명적 낭만”은 이토의 스파이 스캔들과 마찬가지로 “냉전과 미디어 스펙터클 속에서 유아적 놀이로 희화화되거나 지하에서 모의된 범죄로 표상”되었다(272쪽). 특히 적군파의 행선지가 북한이라는 사실이 이 점을 더욱 극대화했다. “그들의 투명성과 진실성은 북한이라는 무대장치 앞에서 결코 증명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287쪽). 일본의 전후민주주의가 내세운 보편주의의 규범은 북한을 인정하지 않는다. 젊은 투쟁가들의 혁명은 이렇게 국가의 전복이라는 목표를 향해 출발하기도 전에 이미 “비밀과 음모와 테러의 스펙터클”(287쪽)의 세계에 갇히게 된다.

III. 새로운 트릴로지를 기대하며

이 책을 포함하여 저자의 일본 정치사상사에 관한 트릴로지는 사실 읽기 쉬운 책은 아니다. 그것은 물론 칼 마르크스, 칼 슈미트, 미셸 푸코, 조르조 아감벤 등의 논의를 비롯하여 마루야마 마사오(丸山眞男), 다케우치 요시미(竹内好), 서경식 등 일본을 대표하는 지식인들의 사유를 어느 정도는 섭렵해야 저자의 주장하는 바를 따라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그러한 표층적인 요인 외에도 이 책을 읽기 어려운 이유가 하나 더 있다. 그것은 저자가 일본에 관한 우리의 인식에 전도를 요청한다는 점이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보편성의 원리, 즉 인권이나 휴머

니즘 등에 기반하여 제국일본의 식민주의와 전후 일본의 무반성을 비판한다. 그들이 저질렀던 행위나 이후에 취했던 자세들이 보편주의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일본의 지성인들 역시 대체로 무너진 보편성의 원리를 회복하는 일이 사상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았듯이 저자의 주장은 이와 반대 방향으로 나아간다. 보편주의에 기대어 식민주의를 비판하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보편주의는 식민주의를 내장하고, 식민주의는 보편주의를 먹고 자란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의 식민주의를 비판하고자 한다면, 일본을 비롯하여 근대 세계 전체를 구성해 온 가장 강력한 원리 중 하나인 보편주의를 그 밑바닥부터 탐사해야 한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보편 없는 보편주의’의 가능성을 떠올릴 수 있을지 모른다. 이를 위해서는 보편에 대한 마지막 한 올의 믿음까지 버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패배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에 관한 저자의 트릴로지는 다음과 같이 바꾸어 쓸 수 있다. ‘보편의 문턱’, ‘보편의 사상’, ‘보편에 대한 패배의 기록’으로 말이다. 그리고 이때 보편이 어떤 특정한 인간의 형상을 정상적인 것으로 고정한다는 의미에서는 ‘인간의 문턱’, ‘인간의 사상’, ‘인간에 대한 패배의 기록’으로 바꾸어 쓸 수도 있다. 서두에 말한 것처럼 저자의 트릴로지를 진정으로 읽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편과 인간에 대한 급진적인 비판의 사유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제 저자의 트릴로지는 완결된 것일까? 우리의 사유는 보편과 인간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패배’로 종결된 것일까? 아마 아닐 것이다. 저자는 문턱 저편으로 추방된 자들, 사상의 콘크리트 공사로 매장된 자들, 패배의 기록들 사이에서 새로운 사유의 준동을 찾고자 한다.

이 책의 에필로그 「양 떼, 늑대 무리 그리고 기민(棄民): 포스트 3·11의 사회 풍경에 대한 소묘」에서 저자는 민주주의와 평화라는 보편 담론을 넘어서 있을 존재로서 ‘야쿠자’를 제시한다. 야쿠자는 “외부에는 통용되지 않는 내부 규범이 지배하는 결사”로서의 “개별사회”를 형성하는데(303쪽), 이들은 국가라는 전체사회에 속하면서도 그 논리에 반드시 따르지는 않는 내부의 공백이자 균열을 형성한다. 그들은 “언제나 국가의 법률 규범을 위반하며 그 바깥에 머무르려는 실천”으로서만 존립한다(304쪽). 야쿠자 외에 저자가 개별사회의 모델로 드는 것

은 오랜 시간 일본 사회에서 저열한 차별을 받아온 ‘부라쿠해방동맹(部落解放同盟)’이나 ‘자이니치 단체들’이다. 주지하듯이 “이들은 제국일본의 ‘신민’뿐 아니라 전후민주주의의 ‘시민’이 형성될 때에 폭력적으로 배제되거나 경계선에 내몰린 존재들”이다(306쪽).

물론 야쿠자는 폭력조직이고, 그들은 항상 기성 정치 권력과 결탁하거나 각종 이권의 독점을 지향해왔다. “야쿠자의 발자취”가 “그야말로 현대 일본 사회의 폐단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305쪽). 저자는 야쿠자를 주체화하고 거기서 정치적 저항의 에너지를 끌어내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야쿠자는 인권과 민주주의의 담론이 지배하는 우리 사회에서 결코 주체화될 수 없으며, 따라서 그것은 보편성의 장막에 찍힌 하나의 얼룩, 혹은 작게 찢어진 틈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야쿠자는 제아무리 강대한 보편성의 원리라도 우리의 삶과 세계 전체를 완벽히 밀봉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가 된다. 보편적인 인간을 형성하기 위해 반드시 배제되어야만 하는 또 다른 인간의 형상, 여기에 사유의 새로운 도약대가 있다. 나는 이를 일본의 중세사 연구자 이시모다 쇼(石母田正)의 말을 빌려 ‘악당(惡黨)’이라 칭하고 싶다. 이시모다는 일본의 고대적 질서가 타락하면서 그 내부에서 악당이 등장하는 과정을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라 그려낸 적이 있다(이시모다 쇼, 2024). 마치 어미의 배를 찢고 튀어나오는 에일리언처럼, 퇴폐한 고대적 질서의 한구석에서 태어난 이들 악당은 자신들의 모체인 고대 세계를 붕괴로 이끈다. 그렇지만 태생적으로 고대의 퇴폐를 공유하는 악당은 결국 스스로 사멸한다. 그런 의미에서 악당은 정치적 주체가 아니다. 그들은 정치 그 자체를 정지시키는 정치의 극한이자 심연이다.

저자는 야쿠자 외에도 일본의 호스트에도 관심이 많은 걸로 안다. 과거부터 그는 개흠레꾼, 밥풀떼기 같은 “하나의 살덩어리, 하나의 움직임”에 주목해왔다. 보편적 규범을 따르지 않으며 정상성의 범주에서 이탈한 이들 악당의 형상을 다루는 새로운 사유의 트릴로지가 조만간 시작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참고문헌

- 김향. 2015. 『제국일본의 사상: 포스트 제국과 동아시아론의 새로운 지평을 위하여』. 서울: 창비.
- _____. 2025. 『어떤 패배의 기록: 전후 일본의 비평, 민주주의, 혁명』. 서울: 창비.
- 이시모다 쇼. 2024. 김현경 옮김. 『일본 중세적 세계의 형성』. 서울: AK.
- 金杭. 2010. 『帝国日本の闕: 生と死のはざまに見る』. 東京: 岩波書店.

